

社 說

내년 예산 확보, 지역정치권 여야 존재할 수 없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7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9.7% 많다. 예산 확장 기조가 뚜렷하다.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가 넘는다. 세계 금융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한 2009년의 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 속에서도 강원도의 내년도 국비 목표액 5조 5,000억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도로·철도 SOC(사회간접자본) 등 도의 중점 추진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제외됐기 때문이다.

즉, 도의 1순위 SOC 사업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비롯해 춘천~철원 고속도로, 경원

선(백마고지~월정리) 복원, 금강산선(철원~유곡) 복원 등 사업 예산이 제외됐다. 당초 도는 4·27 관문점 선언 이후 급격히 개선된 남북관계 분위기에 맞춰 이들 사업을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신규 추진했다.

이제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강원도 예산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물론 신규 사업이지만 동해북부선을 비롯해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은 ‘통일 한국’을 위해 언젠가는 건설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만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 전체를 보는 ‘혜안’으로 나라살림을 살펴야 한다. 국회는 470조원의 국민 세금을 걷고 지출하는 데에 무거운 책임감과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 정부 예산은 한정된 국가 자원에서 민간이 쓸 돈을 정부가 가져다 쓰는 것이다.

여기에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각 부처 예산안에서 누락된 부분을 배속된 상임위

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나 후된 도 SOC의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내년 도 관련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 여야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도 국회의원들

도로·철도 등 SOC사업, 정부 예산안서 제외

내년 국비 목표액 5조5,000억원 확보 빨간불

도·지역 국회의원, 사생결단으로 뛰어야

은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두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정부 예산안 심의에 임해야 한다. 강원도 SOC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 편성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고용 창출과 내수 진작에도 효과가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나라의 예산을 SOC에 투자하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교통인프라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이며 지역의 발전 척도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다. 국가 균형발전을 운운하면서 신규 사업과 경제성을 이유로 도 SOC 예산이 줄줄이 제외된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 된다. 이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도 주요현안 예산 신청액 85% 확보, 신규 SOC 모두 배제

가리왕산 복원·평화기념관
동해선 철도 등 전액 미반영
최종 국회서 부활만이 해법

올림픽 1주년 기념식 19억원
춘천~속초 고속철 17억 반영
일부 현안 일정부분 성과 거둬

가리왕산 생태복원, 레저사업 등 포스트 올림픽 예산이 2년 연속 불발, 최종 예산심의 단계인 국회에서의 부활만이 마지막 해법으로 남겨졌다. 강원도는 주요 현안 164개 사업에 대해 당초 신청액(1조 3884억 6600만원)과 비교, 정부안(1조 1887억 5500만원)이 담겨 신청액 대비 85%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포스트 올림픽 예산과 남북교류망을 포함한 신규 주요SOC사업 등 핵심예산이 줄줄이 제외, 강원도 미래먹거리 기반 창출 등 동력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스트 올림픽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스트 올림픽 예산은 모두 빠졌다. 산림청이 추진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사업은 77억 8700만원이 전액 불발됐다. 내년 봄부터 생태복원에 나설 계획인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에 한도 외 예산으로 올렸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오는 3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생태복원 계획안을 심의한다. 국회에서 복원예산이 부활하지 못하면 재정부담은 강원도로 떠넘겨 질공산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레저사업인 평화기념관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74억원 요구액도 전액 미반영됐다. 평창올림픽 제2막으로 남북공동유치를 계획한 2021동계아시안게임 개최 신청 예산 50억원도 불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공식의제 채택을 통한 정부적해법 마련이 시급해졌다. 올림픽 1주년 기념식인 'Again평창=평화' 행사는 정부안에 19억원이 극적으로 담겼다. 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74억 5000만원 전액이 불발됐다. 최문순 도지사가 최

근 청와대를 찾아 예산 반영을 지속 요청, 행사 개최 여지의 불씨를 살려냈다.

#남북·일반SOC사업 예산

도가 추진 1순위로 각각 확정된 남북SOC와 도내SOC 대표사업 예산이 모두 배제됐다. 남북SOC 1순위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에 채택된 동해선 철도로도 내 구간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연결사업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남북철도공동조사까지 완료했지만 예산반영은 뒤로 미뤘다. 도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면제 건의에 다시 나선다.

5년국도와 북측 평가, 원산을 위한 춘천~철원 고속도로 연결 예산 10억원도 불발, 도는 이 사업의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도내 SOC1순위 사업인 제2경춘국도 사업 요구액 10억원도 미반영됐다. 이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서해안·수도권·남부·동해안 지역 연결 최단고 통망인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 10억원도 제외됐다.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는 17억원 요구액이 극적으로 반영됐고, 여주~원주 철도는 신청액(10억원)보다 증액된 30억원이 반영됐다.

#일반현안사업

도가 총력을 기울인 몇몇 현안 주요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동해안군 경제철책 철거를 비롯해 속초항 크루즈터미널시설 증개축, 쌍천상승가뭄해위험지구정비, 속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기재부 최종 예산심의의 앞두고 검토 중으로 분류, 예산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 예산팀이 기재부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지속 전달, 최종심의를 예산을 반영시켰다. 동해안 군경제철책 철거는 220억원 요구에 180억원이 반영됐다.

남북 평화크루즈 운항 시 중심항이 될 속초항의 크루즈터미널시설 증개축 사업은 도 요구액 63억원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23억원을 삭감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도 요구액 그대로 담겼다. 반면 남북산림협력의 컨트롤타워인 통일산림복구센터 설립(2억 5000만원)예산은 박지은

2019년도 강원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현황

| 주요현안 사업 | 신청액 | 부처안 | 정부안(추정) |
|------------------------|------------|------------|------------|
| 올림픽 동원현안 | | | |
| 올림픽 1주년 기념 Again평창평화행사 | 74억 5000만원 | - | 19억원 |
| 가리왕산 생태복원 | 77억 8700만원 | 77억 8700만원 | - |
| 평화기념관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 74억원 | - | - |
| 2021 동계아시안게임 개최 | 50억원 | - | - |
| 남북 및 도내 SOC사업 | | | |
|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 200억원 | 17억원 | 17억원 |
| 동해선 강릉-제진철도 | 10억원 | - | - |
| 춘천-철원고속도로 | 10억원 | - | - |
| 여주-원주철도 | 10억원 | 30억원 | 30억원 |
| 제2경춘국도 | 10억원 | - | - |
| 제천-영월고속도로 | 10억원 | - | - |
| 동해선포항-삼척철도 | 1300억원 | 2350억원 | 2177억원 |
| 일반현안사업 | | | |
| 동해안군 경제철책 철거 | 220억원 | 220억원 | 180억원 |
| 동해항 3단계 개발 | 1428억원 | 1428억원 | 1322억원 |
| 속초항 크루즈터미널시설 증개축 | 63억원 | 40억원 | 63억원 |
| 쌍천상승가뭄해위험지구정비 | 52억 5000만원 | - | 50억원 |
| 통일산림복구센터 설립 | 2억 5000만원 | - | - |
| 국립산림복지단지 시범조성 | 15억원 | 15억원 | 15억원 |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93억 2300만원 | 73억 2300만원 | 43억 8700만원 |
| 폐광지역 관광자원개발사업 | 1억원 | 83억원 | 82억 6400만원 |



예산철마다 기재부 눈치보기 지자체 '분통'

지역 판단·추진 사업 다수 불구
지사·시장·군수 때마다 동분서주

"언제까지 자치단체가 기획재정부에 매달려 예산구걸에 나서야 하나?"

강원도와 시·군 등 지자체가 정부 예산철마다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 설득에 매달리는 상황이 매년 반복,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이 자치분권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이달 초 민주당 도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도 속원사업들에 "100% 기재부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지난달 30일 기재부를 찾아 올림픽 사

후활동 예산을 비롯한 국비확보에 나섰으나 대다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다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도내 시장·군수들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달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정부 세종청사로 향했다. 유태호 태백시장은 2차례 기획재정부를 찾아 장성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반영시켰고, 김철수 속초시장은 기재부를 찾은 끝에 물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예산을 정부안에 넣었다.

그러나 시·군마다 미반영된 예산들이 더 많다. 김한근 강릉시장과 최승준 정선군수는 행정안전부를 찾아 지역현안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통한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금전해빙 비치피어 등 올림픽 이후 신성장동력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시장은 인제군수도 2차례 기재부를 찾았고, 조인복 양구군수도 최 지사의 정부청사 일정에 동행하는 등 시장·군수들이 동분서주했다.

이처럼 일선 시장·군수들이 정부를 찾아 요청하는 사업 중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추진하는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사업도 있지만 노후 인프라 정비와 국도 등 지역 차원에서 판단, 추진해야 할 사업도 다수 있다. 이들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 단위에 재정집행권을 쥐어 한다는 것이 지자체 일선의 공통된 목소리다. 김어진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18 강원사랑 3대기획

재향도민과 출향도민의 애움림 한마당인 '2018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가 8월 30일~31일 이틀간 정선군 하이원랜드 리스호텔에서 개최된다. 강원사랑 3대 기획은 '폐광지역 발전방안 특별좌담회', 강원인 역량개발을 위한 '경제특강 & 민선간담회', 정경 강원인의 대자연을 만끽하며 고향사랑 의지를 다지는 '제15회 금강배 강원사랑 골프대회'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개회식 : 8월30일(목) 오후5시 정선 하이원랜드리조트 그랜드볼룸

폐광지역 발전방안 특별좌담회

- 주최 : 강원랜드 사회공헌과 폐광지역 상생방안
- 일시 : 8월 30일(목) 오후 3시30분
- 장소 : 하이원랜드리조트 2층 볼룸

경제특강&민선간담회

- 일시 : 8월 30일(목) 오후 5시
- 장소 : 하이원랜드리조트 그랜드볼룸
- 특강 : 임길청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남북한 평화시대의 새로운 강원도 경제지리학"

제15회 금강배 강원사랑 골프대회

- 일시 : 8월 31일(금) 오전 6시30분
- 장소 : 정선군 하이원CC



임길청
경기대 경영학 교수

주최 : 강원도민일보 (사) 강원도민회 중앙회

후원 : 강원랜드, 강원도, 강원도의회, 정선군

행사무의 : 강원도민일보 기획사업부 (033-260-9310, 9371)

